

# 입법정책정보

-제12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	1
1. 노인복지법 시행령 .....	1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3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6
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8
5.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17
1.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7
2.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19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21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26

## I 상위법령 제 · 개정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01호, 2023. 12. 5., 일부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 ·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 · 군 · 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 · 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20조의10(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 ·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 · 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 · 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 확인 기간
2. 점검 · 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 · 확인 기관 수 및 점검 · 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시행 2011. 12. 30.] [대전광역시조례 제4017호, 2011. 12.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 보호·치료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
4. 노인학대 실태조사
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정보 제공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보호·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시설 또는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 ③ (생략)

-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 ⑨ (생략)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조례」

[시행 2022. 10. 14.] [대전광역시조례 제5910호, 2022.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交通安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交通安全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交通安全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交通安全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交通安全기본계획 및 지역交通安全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交通安全교육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交通安全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交通安全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交通安全기본계획 및 지역交通安全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통학로 안전정도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어린이통학로交通安全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交通安全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交通安全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交通安全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交通安全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交通安全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交通安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交通安全지도
3.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2.10.14.>
2. 삭제 <2022.10.14.>
3. 삭제 <2022.10.14.>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89호, 2023. 12. 19.,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80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공연장 및 미술관으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의 실시주기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등의 범위는 대상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장애예술인이 공연·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공연·전시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 주요내용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공연·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 가. 장애예술인
    - 나.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3. 장애예술인이 공연·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

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7. 4. 28.] [대전광역시조례 제4893호, 2017. 4.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5호, 2023. 12. 12., 일부개정]

### □ 제정·개정 이유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서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원격수업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로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 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 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⑨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시행 2023. 4. 21.] [대전광역시조례 제6032호, 2023. 4.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2. 자립지원 사업
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4. 급식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주차장의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하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완화구간: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 □ 주요내용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 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 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2) 1)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 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 우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 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

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법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② ~ ⑦ (생략)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3. 11. 6.] [대전광역시조례 제6110호, 2023. 10. 6., 일부개정]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출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0.6.>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frac{\text{철도연장(km)}}{210} \times \frac{\text{평균승차인원}}{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11.] [대구광역시조례 제6058호, 2023. 12. 11., 제정]

#### □ 제정이유

주차장에 ‘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 실현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차공유에 관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 및 평가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촉진 정책을 고려하여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유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및 주차공유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구·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한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운영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39호, 2023. 12. 18., 제정]

## □ 제정이유

미래의 주역인 세종시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와 노동 관계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근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또는 거소를 둔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자격을 갖춘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말한다.
3. “근로 청소년 권익”이란 시 소재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대우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 관할구역 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 기준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합당한 권익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권익과 관련된 상담 및 구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근로 청소년 및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근로 청소년 권익에 관한 교육
3.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부당한 처우 등 권익 침해 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협력 방안
6. 그 밖에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 고용 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개발
2. 근로 청소년 권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근로 청소년 권익 인식 향상을 위한 시 소재 사업장 방문 및 홍보
4.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선도하는 사업장 발굴·홍보를 위한 우수 사업장 선정
5. 그 밖에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소속 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계 공공기관·민간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3-0387 / 요청기관: 경기도 안산시]

##### □ 의뢰안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하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지방연구원법 제5조에서는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제1항),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그런데 지방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연구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제5호),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제6호), 이사회에 관한 사항(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연구원법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연구원법에서는 임원의 구성·직무·선임·임기 등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제10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11조), 운영재원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제13조 및 제14조) 등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제8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등),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제4항 등)하고 있을 뿐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도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지방연구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지방연구원법이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연구원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연구원법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연구원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연구원법 제5조에서는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제1항),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연구원법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연구원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의회의 동의를 정관변경의 필수적 절차로 두고 지방연구원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연구원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2. 23. 의견제시 21-0061 참조).

나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연구원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경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8. 4. 의견제시 23-0288 참조).

따라서 지방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3-0364 /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 □ 의뢰안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본문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에서는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대하여 조례에서는 그 차령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 □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 미만은 9%, 2억원~200억원은 19%, 200억~3000억원은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 뉴질랜드

뉴질랜드 거주 기업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기업(지점 포함)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에 따라 뉴질랜드 원천 소득(New Zealand-sourced income)에 대해 과세된다. 뉴질랜드의 법인소득세(CIT) 세율은 28%이다. 법인세율 28%는 2012년 소득세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OCED의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솔루션의 핵심 구성요소인 GloBE Rules을 시행하는 최소 국가수가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이 규칙 또한 시행할 예정이다.

#### 독일

독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독일의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의 15%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 기업은 주(州)정부가 과세하는 영업세, 옛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세 등 추가 세금을 합쳐 과세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장기회, 투자, 혁신, 과세 간소화 및 공정 과세에 관한 법률안(약칭 「성장기회법」)’을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독일에서는 2028년까지 연간 약 70억 유로(약 9조9,000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 러시아

러시아는 「세법」 제284조에 따라 기본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자 및 소득 유형에 따라 0~30%까지 특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및 의료기관의 소득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인증을 받은 IT 기업의 경우 3%, 국제운송 부문의 일부 외국기업 10%, 러시아 기관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통상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3 재정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 250만

링깃(한화 약 7억원) 규모 이하 중소기업들에 대하여는 15~24%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15만 링깃(한화 약 4,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15%, 60만 링깃(한화 약 1억 7천만원) 이하는 17%, 60만 링깃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고 있다.

## 멕시코

멕시코의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포괄하는 개념인 소득세에 속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법인 연간소득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각 기업체와 납세자의 경제 활동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세율 및 공제율이 존재한다. 일례로 동법 제74조에 따라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30%가 공제되며, 제79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미국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이외에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한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며, 미국 내 사업·상거래 활동과 실제 관련된 사업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국세법」 제11조, 제882조). 주 법인세율은 주마다 상이한데,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오히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 6개 주는 주 법인세가 없다. 이를 제외한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법인세율은 2.5%(노스캐롤라이나)부터 11.5%(뉴저지)까지 다양하다.

## 베트남

베트남은 「법인소득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10조에 따라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석유가스 및 희귀자원 탐사·채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2~50%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신규투자 또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우대세율뿐만 아니라 면세, 감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특별투자우대에 관한 결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7년간 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 및 외국 법인 모두 동일하게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17%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당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매년 과세소득 중 최초 1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800만원)까지의 75%가 면세 대상, 이후 추가 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의 50%가 면세 대상이 된다.

##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연방차원의 법인세 제도가 아닌 각 토후국별로 조세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22년 10월 3일 「2022년 제47호 법인세 및 사업세에 관한 연방법」을 공포하여 연방차원의 법인세를 도입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법인세율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에 따른 내각결정에서 정한 375,000AED(한화로 약 1억 3,24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과세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 0%, 이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9%까지로 하고, 자유구역(Freezone) 내 기업에 대하여는 자유구역 외 본토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법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 일본

일본은 법인의 종류와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달라진다. 자본금 1억엔 이하인 보통법인(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법인소득 800만엔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사업자\*를 제외하고 15%, 적용제외사업자 19%, 연간 법인소득 80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그외 보통법인은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제외사업자: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종료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연평균액이 15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등, 통산제도상 적용제외사업자 포함.

## 중국

중국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기본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25%로 정해져 있다. 다만, 특정산업육성·특정지역장려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 공고·통지로 각기 다양한 우대 또는 한시적 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현행 조치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6천만원) 미만은 실효세율 5%, 과세표준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8천4백만원) 미만은 실효세율 2.5%를 적용한다.

## 프랑스

2023년 프랑스에서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다. 단, 연매출액 42,500 유로(한화 약 6,0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하고 42,5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세전 1,000만 유로(한화 약 140억원) 미만이면서 모든 자본이 납입자본으로 자본금의 75% 이상을 자연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2023년 1월 1일 기준).

## 태국

태국 「국세법전」에서는 법인세율을 통상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본금 5백만밧(한화 약 1억 8,450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천만밧(한화 약 11억 7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0~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이익 0~30만밧(한화 약 1,107만 원) 이하 비과세, 30만밧 초과~3백만밧(한화 약 1억 1,070만 원) 이하 15%, 3백만밧 초과 20%가 각각 적용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공공누리 제1유형, 2023.12.13.